

# 반복되는 '홈쿨링 빙자 아동학대' 사건

### '온몸에 멍' 11세 아들 숨지게 한 계모·친부 학교에 '필리핀 유학...홈쿨링 하고 있어' 7일 이상 미인정 결석부터 나이에 입력

홈쿨링을 빙자한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의 안전 확인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미인정 결석 학생을 통해 홈쿨링 학생 규모만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11)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학교의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계모 B(42)씨, 친부 C(39)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쿨링하고 있다"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부부는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홈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을 교육 당국은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본다.

2021년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본 가이드북'에 따르면, 홈쿨링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연속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보고 특별 관리한다.

결석 첫 날부터 학교가 유선 연락을 통해 출석을 독려하고, 3~5일차부터는 교사와 사회복지전담 직원이 함께 집을 찾아 아동학대 정황 등을 살핀다.

결석 6일차에는 학교 방문 면담을 요청하고, 7일차부터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IS·NEIS)에 결석 사실을 등록한다. 9일차부터는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과 조치 사항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중에 결석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학대 징후를 발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계모 B씨와 A군이 학교를 찾자 가정방문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쿨링을 이유로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다가 결국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2016년 9월 대구에서는 3년 이상 홈쿨링을 하다가 복학, 며칠만 학교에 나갔었던 초4 학생이 실종됐다가 어머니, 누나에 이어 숨진 채 발견됐다.

2016년 3월 충북 청주에서는 네 살배기 의붓딸을 학대하다 살해하고 암매장한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범죄 행각이 5년만에 들쭉날쭉한 일이 있었다.

조사 결과 숨진 의붓딸은 2011년 12월 만 4세로 숨졌는데, 친모가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제출하는 등 연기를 해 2014년부터 기록상 초등학생이었다.

학교에서는 딸을 보내지 않은 이유를 유선으로 확인했고, 당시 부모는 가정형편을 이유로 "홈쿨링을 추진하겠다"고 하며 가정 방문을 거부했다.

국내에서 홈쿨링을 하는 중인 학생이 정확히 몇 명에 이르는 지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홈쿨링은 의무교육 대상 연령인 초·중학교에서는 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는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 9월까지 9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으로 나이에 등록된 학생은 1만4139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6235명(44.1%)이 초등학생이다.

이 중 사유를 '홈쿨링'이라고 답한 학생은 같은 기간 1725명이었다. 이는 2020년 1189명, 2021년 1702명, 지난해 172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다만 이는 미인정 결석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결석 사유를 묻고 홈쿨링이라고 답한 경우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과 9일 잇따라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아동학대 여부를 더 신속히 찾고자 집중관리대상 학

생 관련 절차,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홈쿨링 학생을 포함한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홈쿨링,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 지속되는 학생에 대한 교내상담, 가정방문 등을 강화하겠다"며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 결석 이력을 관리, 아동에 대한 학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터지면 결석 아동의 관리와 지침을 강화하는 해법 역시 하루 이틀 반복돼 온 일이 아니다. 교육부 등 당국에서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쿨링과 같이 자녀의 취학을 거부하고 있는 가정의 부모는 학교 교사나 경찰이 동행해 방문하겠다는 데 거부감을 보인다는 전언이다.

학교에서도 지침대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가 '교사가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했다'는 민원과 소송에 시달릴 수 있어 부담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에게 대면 확인, 화상 통화라도 하라고 권유를 해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고민 중"이라며 "부모가 나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느냐 하며 연락을 안 받거나 전화번호를 바꿔 버리는 일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광주 동부소방, 신규소방공무원 비상탈출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0일 실무실습중인 신규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긴급탈출능력 향상을 위해 특별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강진소방, 산업단지 표본 화재안전조사 실시

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지난 1일부터 15일간 관내 산업단지에 대해 표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담양소방,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장소 점검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보다 더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영화상영관 및 실내놀이시설(키즈카페 등)의 피난·방화시설을 점검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여수소방 평여119안전센터,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 구해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 평여119안전센터 구급대가 최근 화강동 산업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심정지 사고에 출동해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광양소방,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대상 '특수시책' 추진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화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공동주택 대피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46단지를 대상으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양=김승호기자



### 완도해경, 지휘관 관할해역 해상 치안 현장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8일 경비함정을 타고 관할해역 해상 치안 현장을 점검하였다.

완도=기동채재본부

## “광주 사립유치원 10곳 중 4곳 보수지급기준 미공개...법 위반”

### 학벌없는시민모임 “벌금·형사 처벌토록 법령개정 건의”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0개원 중 4개원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시하지 않아 유아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2022학년도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수당 공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중 59

곳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봉급, 수당의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20~30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시행된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은 교직원의 급여,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두고, 교육기관정보

공개법에 근거해 규칙을 유치원알리미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시민모임은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는데 여전히 일부 유치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법령을 위반했지만 제재하거나 처벌을 줄 수 없으며 교직원 보수지급기준도 유치원

별로 달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단체는 학부모들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적 차원에서 사립유치원 규칙 전수조사를 통해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직원 보수지급기준을 미공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벌금 등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국회·교육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생존자 옮기는 한국 긴급구조대

11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일대에서 한국 긴급구조대(KDRT)와 튀르키예 구조대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 60대 생존자를 구조해 앰블런스로 옮기고 있다.

11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일대에서 한국 긴급구조대(KDRT)와 튀르키예 구조대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속 60대 생존자를 구조해 앰블런스로 옮기고 있다.

## ‘김학의 출국금지’ 금주 첫 결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이성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 등 관련 사건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출국금지 불법 논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 연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선고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현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금지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국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면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별건으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권한이 없고 당시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사후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시스